

# 또 다른 세월호 참사를 낳을 박근혜식 '정상화' 공공기관 '정상화' 반대 투쟁 정당하다

6·4 지방선거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항의가 표현된 선거였다. 비록 대안 부재로 참패를 모면하긴 했지만 새누리당은 전국 정당득표 합계도, 광역단체장 득표 합계도 야권에 뒤졌다. 특히, 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가 압승을 거뒀다.

그럼에도 박근혜는 극우 총리를 앞세운 개각으로 정면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세월호 정국으로 차질이 빚어진 노동자 공격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의 압박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여유가 없다.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와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유럽 재정 위기라는 경제 상황을 배경으로 출범했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동안 공공기관 부채가 급증해, 이것이 잠재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강하다.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든 공공 부채를 줄이라며 공공기관 '정상화'를 밀어붙이는 이유다.

박근혜는 친박 핵심인 최경환을 새 기재부 장관으로 앉혀 공공부문 공격의 돌격대장으로 삼으려 한다. 최경환은 "영리 의료법인, 영리 교육법인을 육성해야 한다", "대대적 규제완화와 공기업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혁신해야 한다"는 소신을 가진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자다. 최경환은 취임하자마자 부동산 규제 완화, 공공기관 '정상화'를 우선 과제로 밀어붙이려 한다.

## 정상화라 쓰고 민영화라 읽는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로 국가 기관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증폭하자 이를 이용해 공공기관 '정상화'를 추진하려 한다.

'해피야나' '원전 마피아' 같은 사례를 보면 사람들이 공공기관을 불신할 만하다. 한국에서는 특히 공공기관이 권위주의 국가의 부속물 구실을 해 온 역사가 있다. 지금도 공공기관 임원은 정부의 낙하산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정상화'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제2의 세월호 참사를 낳을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

낙하산 인사가 여전한 것은 물론이고, 공공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커녕 민영화를 도입해 공공부문을 시장의 광기에 떠맡기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부채 삭감의 70퍼센트를 '사업조정'과 '자산매각'을 통해서 하겠다고 밝



혔는데, 그 내용의 대부분이 민영화다. 민영화는 경쟁과 이윤의 논리를 강화해 값싸고 안전한 공공서비스 제공은 뒷전에 두게 만들 것이다.

'정상화'의 가장 악질적 사례 중 하나가 공항철도 재민영화다. 정부는 빚더미에 앉은 공항철도를 철도공사에게 떠맡기더니 철도공사가 환승역을 만드는 등 이용객을 늘려 놓자, 또다시 민영화하려 한다. 그 피해는 철도를 이용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고스란히 지게 될 것이다.

부채를 빌미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복

리후생비를 공격하는 것도 엉뚱한 고통 전가다. 노동자들은 공공기관 부채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 감사원은 이미 공공기관 부채 증가 중 70퍼센트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정부가 줄이라는 복리후생비를 다 모아 봤자 중점관리기관 총 부채의 0.036퍼센트밖에 안 된다. 그리고 경조사비, 자녀 학자금, 보육비 등은 마땅히 제공돼야 할 임금의 일부다.

박근혜는 '복리후생비가 0.03퍼센트밖에 안 되더라도 공공기관이 출선수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다. 이것은 공공기관 노동자 조건 공격이 전체 노동자 공격의 지렛대라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자신의 조건을 잘 방어해야, 다른 부문 노동자들의 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철도 파업이 보여 줬듯이,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투쟁은 공공성을 지키는 보루다.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공공서비스와 임금·노동조건을 함께 방어하며 공공부문 공격에 맞서 싸운다면 지지를 받을 수 있다.

## 고용·보건 30개 공공기관 통폐합 시도 공공기관 '정상화'가 복지와 공공서비스 축소 계획임이 드러나다

정부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고용·복지 관련 30개 공공기관들을 대규모 구조조정하려는 계획이 폭로됐다.

이 계획은 '일을 통한 복지'를 강조한다. 실업 급여 등 현금으로 제공되던 복지를 줄이고, 일을 해야만 복지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실업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은 경제 위기에 아무런 책

임이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는 일조차 더 까다롭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소득이 너무 적어 사회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추징업무를 민간 신용정보회사로 넘기겠다고 한다. 이들은 훨씬 가혹하게 체납자들의 소득을 압류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

원 등 보건 관련 공공기관을 통합하고, 건강보험공단 노동자들을 대폭 감원할 계획도 있다. 대규모 인력 감축은 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서비스 기능을 크게 훼손할 것이다. 국립중앙의료원의 일반 진료 기능도 사실상 없애려 한다.

이처럼 복지 삭감과 노동자 해고, 공공서비스 축소를 낳을 이 악랄한 계획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



#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에 나서는 보건의로 노동자들

박근혜는 의료 민영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영리행위가 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크게 늘리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병원들이 영리 자회사를 세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건의로 노동자들은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선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하고 있다.

보건의로노조는 오는 6월 24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보건의로노조 산하 60여 개 지부에서 5천여 명이 이번 파업에 참가할 계획이다.

보건의로노조는 박근혜 정부가 6월 10일 발표한 시행규칙 개정안과 가이드라인을 철회하지 않으면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7월 22일을 전후로 2차 파업을 벌이겠다고 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도 6월 27일에 서울대병원, 경북대병원, 충북대병원을 중심으로 1차 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두 노동조합 등은 민주노총 총궐기 대회가 열리는 6월 28일에도 공동 주최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심중팔구 박근혜는 노동자들의 파업에 '철밥통', '환자의 생명을 불모로 하는 집단이기주의' 같은 딱지를 붙이려 할 것이다.

그러나 의료 민영화야말로 환자의 생



명을 불모로 자본가들의 '철밥통'을 지키는 정책이다. 이에 맞선 투쟁은 의료비 폭등, 의료의 질 악화, 공공병원 폐쇄에 맞선 정의로운 투쟁이다.

보건의로 노동자들의 파업은 세월호 참사로 터져 나온 대중적 항의를 결집시키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생명과 안전을 내팽개치려는 박근혜 정부에 맞서 조직된 노동자들이 싸우면 수많은 사람들이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것이다. 지난해 철도 파업처럼 말이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민본과 지역 대책위들도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파업을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연대 활동을 광범하게 펼쳐 나갈 것이다.

철도 민영화도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철도를 갈갈이 쪼개 민영화하려는 계획

의 일환으로, 먼저 올해 안에 화물 철도 부분을 민영화하려 한다. 민영화를 앞둔 노동자 통제의 일환으로 강제 전출도 또 다시 강행하려 한다. 철도 노동자들은 이에 맞선 저항을 준비하고 있다.

공공부문에서 앞장서서 투쟁하는 보건의로 노동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자. 이 투쟁은 우리 모두를 위한 투쟁이다.

## 공공부문 노동자들도 민주노총 총궐기에 적극 참가하자

민주노총이 6월 23~28일에 총궐기를 하기로 결정했다. 7월 22일경에는 민주노총의 동맹 파업도 예정돼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 경쟁을 하는 기업들과 그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정부가 보통 사람들의 안전에는 신경 쓰지 않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한 비극적 사건이다. 조직 노동자들도 세월호 참사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며 항의 운동 초반부터 적극 참가해 왔다.

특히, 세월호 참사는 민영화·외주화 반대, 공공성 강화라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요구가 옳았음을 보여 줬다. 민주노총의 요구처럼, 이 참사에 커다란 책임이 있는 박근혜는 퇴진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세월호 참사 항의 분위기

속에서 산업 현장에서도 싸우면, 즉 생산을 멈추는 파업을 하고 이윤에 타격을 준다면 박근혜 정부를 저지할 실질적 힘이



지난해 12월 28일, 양대노총 노동자 10만 명이 함께 모여 박근혜 정부의 노동탄압과 철도민영화에 항의하고 있다.

될 것이다. 각 노동자 부문이 자신의 작업장 요구를 걸고 동시에 싸우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

양대노총 공공기관 노동자들도 6월 총궐기와 7월 동맹파업 집회에 적극 동참하자. 이 투쟁들이 성공적으로 조직된다면 8월 말로 예정된 '정상화' 반대 파업도 큰 힘을 얻을 것이다.

또,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사용자인 정부에 큰 타격을 줘, 정부의 양보를 받아내는 데도 유리할 것이다.

이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28일 민주노총 본부 침탈을 규탄하는 공동 항의집회를 개최한 바 있고, 지금도 '정상화'에 맞서 공동대응하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가 요구하는 노정교섭도, 강력한 투쟁이 뒷받침될 때 그 결과가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나올 수 있다.

**노동자연대**  
6월 23~28일 민주노총 총궐기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말한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박근혜 퇴진 • 노동운동 연합 결성  
• 반영향 • 규제완화 중단 • 노동시간 단축  
• 최저임금 • 향상임금 정상화  
비밀 22-1111-1111 (노동자연대) 02-777-2792

**노동자 정치 신문**  
"민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노동자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http://wspaper.org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박근혜 퇴진! 민영화 저지! 노동탄압 분쇄!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통상임금 정상화!  
**6.28. 노동자 총궐기의 날**  
일시 : 2014. 6. 28.(토) 16:00  
장소 : 청계광장(이후 행진)  
14시 각 단위 사전대회 진행